

# JB Weekly Web Magazine

| 2026.02.25

“ Your Gateway to Global Trade ”



## Contents

---

- 01 "IEEPA 관세 위법" 상호관세 꺾였지만 '관세 드라이브'는 계속된다 p.1
- 02 "수출 플랫폼부터 물류까지" 중기부 K-브랜드 글로벌 진출 위해 플랫폼 육성 p.3
- 03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총괄 전담팀 신설... 우회수출.전략물자 불법수출 조사 p.4
- 04 "탄소가 수출 경쟁력인 시대" CBAM 대응 범정부 지원체계 가동 p.5
- 05 무역위, 태국산 섬유판에 최대 22.44% 덤핑방지관세 부과 p.8

1

## “IEEPA 관세 위법” 상호관세 꺾였지만 ‘관세 드라이브’는 계속된다

### 122조 임시관세·301조 조사로 ‘관세 재건’ 예고... 환급은 미정, 불확실성은 현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위법·무효로 판단하면서 (현지시각 2월 20일), 미국의 관세정책이 법적 정당성의 경계선을 다시 그리게 됐다.

이번 판결의 대상은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캐나다 35%, 멕시코 25%, 중국 10%)이며,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에 기반해 있어 이번 판결 결과와 무관하다.

2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대법원은 6대 3으로 IEEPA 기반 관세에 대해 법률상 권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관세·조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의 전속 권한이며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전제된다는 점. 둘째, 경제·산업 파급력이 큰 조치에 대해 의회가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적용 필요성. 셋째, IEEPA 조문 체계상 관세·부과금이 명시돼 있지 않고, ‘규제(regulate)’ 권한만으로 과세 권한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판결문에서 관세 환급 문제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이미 징수된 관세의 처리(환급 범위·절차·시점)를 둘러싼 실무 혼선은 불가피해졌다.

#### “관세는 여전, 법적 수단만 바꾼다”... 122조·301조로의 이동

판결 직후 백악관의 대응은 ‘후회’가 아니라 ‘우회’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10% 글로벌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오는 24일부터 10% 임시 수입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지만, 하루만에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122조는 국제수지의 근본적 문제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 상황에서 신속 대응 수단으로 최장 150일, 최대 15%까지 임시 관세(또는 쿼터)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IEEPA 공백을 메우는 ‘단기 대체재’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미국 내 재배, 채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주요 광물, 천연자원, 이미 수입 제한이 적용된 품목 등은 임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301조 등 다른 법적 경로를 통한 신규 통상조사를 예고했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정책·관행에 대응해 관세 등 보복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통지·의견수렴·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하나는 관세정책의 지속성이다. 현지 언론이 지적하듯, 미 행정부가 관세의 세율·구조를 재구성해 또다시 관세를 발표할수록 시장은 불확실성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소송 리스크다. 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막히며 122조·301조라는 우회로가 열리지만, 이 우회로 역시 남용 논란과 법적 다툼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히 122조는 150일 시한이 명확해 ‘일시적 관세’라는 성격이 강하고, 의회 연장 승인 여부가 변수다. 301조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대신 시간과 외교적 마찰 비용이 커진다.

환급 문제도 시장의 큰 변수다. 대법원 판결이 관세 부과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환급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환급 범위와 신청 주체·서류 요건·이자 처리 등이 향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KOTRA에 따르면 미국 업계(소매협회·상공회의소 등)는 환급 절차의 신속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집행은 상당한 시간과 분쟁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수입자와 수출자 간 비용 전가·정산 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1

## “IEEPA 관세 위법” 상호관세 꺾였지만 ‘관세 드라이브’는 계속된다

### 122조 임시관세·301조 조사로 ‘관세 재건’ 예고... 환급은 미정, 불확실성은 현실

**주요국 반응: EU·영국은 협정 이행 ‘브레이크’, 한국은 환급 지원 가동**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 협상을 끝낸 주요국의 반응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각) 매체 BBC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대법원 판결 자체가 기업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철강·알루미늄·제약·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관세는 이번 판결의 범위 밖에 남아 있고, 미국이 곧바로 글로벌 관세를 재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급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행될지 불투명해, 비용을 부담해온 주체(미국 수입자)와 거래 조건에 따라 비용을 떠안은 해외 수출자 사이의 정산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현지시각) 폴리τικο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IEEPA 판결 이후 미국의 후속 조치에 대해 “안전한 명확성”을 요구했고, 유럽의회 무역위원장 측에서는 대서양 횡단 무역협정 이행 법안 표결 연기와 비준 보류까지 거론했다. 미국이 어떤 법을 근거로 어떤 관세를 부과하느냐에 따라, 기존 합의가 유지될지 재협상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지 언론은 EU·영국 등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동을 리스크로 보고 역대 공급망·대체 시장·대미 협상 전략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예상도 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유관기관의 대응은 ‘환급 실무’와 ‘불확실성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통상부는 판결이 발표된 직후 긴급 회의를 열어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합동 점검을 예고했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을 즉시 안내하고,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거래처럼 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미 CBP에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수출한 기업을 추출해 기업별로 환급 정보를 제공하고, CBP 발표 동향을 실시간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 4,000여개 기업 중 6,000여 개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했다.

해외 싱크탱크 및 매체에 따르면, 비록 미 대법원이 IEEPA에 따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단기적으로는 122조 기반의 임시 관세가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로 작동하면서, 동시에 301조 등 조사를 통한 중장기 관세가 구축될 수 있다.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환급 문제는 행정·사법적 분쟁으로 장기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업 간 가격·정산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협정 이행과 투자 약속의 재평가를 요구하는 국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수출입 기업으로서 이젠 ‘관세가 얼마나 오르내리는가’뿐 아니라, ‘어떤 법적 경로로 부과되는가’와 ‘환급·예외·계약 조건 정산이 가능한가’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졌다.

한편, 스콧 베네토프 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각) CNN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무역 파트너들 모두 기존 무역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2026년 재무부 (관세) 수입전망도 변함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드라이브는 여전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2

## “수출 플랫폼부터 물류까지” 중기부 K-브랜드 글로벌 진출 위해 플랫폼 육성

### ‘2026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K-브랜드 전문 육성 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진출을 도울 글로벌 플랫폼사를 모집한다고 2월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단계로, K-브랜드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마케팅, K-브랜드 전문 플랫폼 구축 및 물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 선별해서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사용가능한 온라인 바우처 도입, ▲현지 사용 원료 및 의무 표기 사항 등의 특수 사항 반영에 도움을 주는 제품 현지화 사업, ▲현지 유통 채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 프로젝트 시범 운영, ▲온라인에서 검증받은 제품의 오프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첫수출패키지 사업, 마지막으로 ▲국내 오프라인 인기 제품의 온라인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온라인 수출 제품화 사업도 선보인다.

또한 온라인 수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물류 운반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한도를 500만원 상향, 우정사업본부와 중기부 협업을 통한 물류비 30% 할인 적용, 삼성SDS 등의 협조로 선적 및 특송 서비스 할인 적용 등이 지속된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부터 운영한 온라인 수출기업 특화보험의 보장 내용과 대상을 늘려 온라인 수출 거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K-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지식재산처와 함께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해 지재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부분 보완할 예정이다.

추가로 국내에 한정된 뷰티, 패션 분야 플랫폼 중 시장성, 성장성, 혁신성을 기준으로 엄선해 플랫폼 리뉴얼,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을 통한 글로벌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동시에 기존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는 'K-브랜드 챌린지'로 확대해 푸드, 패션, 라이프 영역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으며 해외 빅바이어와 국내 유망기업의 교류 통로인 '글로벌 소싱위크'가 수출전략품목 홍보행사인 'K-BRAND GLOW WEEK'와 통합돼 우리나라 대표 K-BRAND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규모는 11억달러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전체 온라인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이 75.6%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이 국가 전체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3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총괄 전담팀 신설... 우회수출·전략물자 불법수출 조사

### 지난해 총 6,556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2024년 대비 3배 증가

관세청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세관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무역 규제나 제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불법업체가 우리나라의 공급망을 약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는 ①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해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② 한국을 경유지로 해서 특정 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인천, 부산 등 주요 항만 및 기업이 소재한 세관을 중심으로 신설된 무역안보 수사조직과 함께 관세청 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관세청은 이를 총괄하는 조직이 신설되면서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협력도 보다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일반조사 조직 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임시 구성해 2024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총 6,556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했다.

가령 미국의 고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금 가공제품 등을 반입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기업, 반도체 제조장비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전략물자를 정부 허가 없이 제3국을 거쳐 수출금지 국가로 밀수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정식 직제화를 계기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무역안보 조사 업무를 기존 밀수 조사·마약 조사·외국환거래 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할 예정이다.

4

## "탄소가 수출 경쟁력인 시대" CBAM 대응 범정부 지원체계 가동

### 배출량 산정부터 설비 투자까지 전방위 지원... 탄소 비용 관리가 수출판도 좌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CBAM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총 15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기업의 탄소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배출량 감축 투자 촉진,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EU의 이번 제도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통상·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이러한 정부 지원이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BAM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세부 지원계획을 종합·정리했다. 이번 계획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 역량 강화, 탄소배출 감축,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Measurement·Reporting·Verification)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과 디지털 솔루션 보급, 사전 검증 지원이 추진된다. CBAM 대상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이 적용돼 탄소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맞춤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사전 검증 비용 보조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탄소배출 감축 지원도 확대된다. 생산 공정의 탄소배출량을 줄일수록 CBAM 부담이 감소하고 수출 계약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설비 투자 지원이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한국에너지공단),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한국환경공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기업당 최대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규모의 투자비를 지원한다. 이는 단기 대응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전략적 투자로 평가된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4

## "탄소가 수출 경쟁력인 시대" CBAM 대응 범정부 지원체계 가동

### 배출량 산정부터 설비 투자까지 전방위 지원... 탄소 비용 관리가 수출판도 좌우

기업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는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되고, 2029년부터 CBAM 확대 적용이 예정된 세탁기, 자동차부품, 냉장고, 건조기 등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한 최종재(Down stream) 제품 업계를 대상으로 별도 세미나가 개최된다. 탄소배출량 산정 등 실습 중심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돼 기업 내부의 탄소 데이터 관리와 대응체계 내재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제도 시행 단계별로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CBAM은 올해부터 제도 적용이 시작됐지만,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 관련 제3자 기관 검증, 탄소 비용 납부 등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일정에 맞춰 탄소배출량 검증 지원 등 신규 수요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부처 간 협력과 기업 체감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제도 이행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를 완화하고 EU 측과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감축 설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ی겠다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관세청은 지난 10일 EU CBAM 대상이 되는 품목의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 EU의 품목분류 기준 CN 코드와 우리나라의 HSK 코드를 일대일로 매칭한 것이다.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무역 장벽이자 산업 경쟁력의 척도로 작동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지원 패키지는 국내 기업이 탄소 데이터 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저탄소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초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 제도가 확대 적용되고 탄소 비용 현실화가 본격화될 경우, 기업의 대응 속도와 투자 수준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CBAM으로 인한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고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4

## "탄소가 수출 경쟁력인 시대" CBAM 대응 범정부 지원체계 가동

### 배출량 산정부터 설비 투자까지 전방위 지원... 탄소 비용 관리가 수출판도 좌우

● 탄소배출 모니터링·보고·검증(MRV) 대응 역량 강화 ●

지원명	세부 내용	운영기관	모집일정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EU CBAM 배출량 산정·신고 관련 컨설팅 지원(100개 사업장)	한국환경공단	3월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 사업	EU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탄소배출량 자동 산정 및 실시간 관리(MRV) 솔루션 보급(20여 개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4월
산업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CBAM 배출량 산정을 포함한 사업장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및 배출량 확인서 발급 지원(40여 개사)	한국에너지공단	4월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 보급	중소기업용 탄소배출량 계산 및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작성 지원 프로그램 제공(전 기업 대상 무료 보급)	한국원산지정보원	미정
글로벌 환경규제 현장진단 및 내재화 컨설팅 사업	환경규제 대상기업 여부 확인 등 진단(50개사)→CBAM 내재배출량 산정, 탄소데이터 관리·보고체계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0개사)	한국무역협회	(진단) 3월 (컨설팅) 5월
긴급지원바우처: 유럽 통상 애로 특화서비스	배출량 산정 및 사전 검증 비용 보조(보조율: 중견 50%, 중소기업 70%, 바우처 발급한도: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차 모집 완료, 연중 추가 모집

● 탄소배출 감축 지원 ●

지원명	세부 내용	운영기관	모집일정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컨소시엄 주관사의 협력사에 탄소감축 기술·설비·시설 도입 비용 지원(컨소시엄별 최대 50억원, 2026년 105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6.~3.6.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탄소감축 설비 구축 비용 지원(경매방식을 통한 효율적 감축프로젝트 발굴)(기업별 최대 50억원, 2026년 250억원)	한국에너지공단	1.21~2.25.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저탄소 공정 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탄소중립 경영전략 수립 및 탄소감축 설비 패키지 지원(업체별 최대 3억원, 2026년 191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2월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투자비용 보조(업체별 최대 100억원, 사업장별 최대 60억원, 2026년 1,338억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1차 공모 완료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제조공장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기업별 최대 10억원, 2026년 741억원)	한국환경공단	1~2월

●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

지원명	세부 내용	운영기관	모집일정
EU CBAM 대응 합동 설명회	EU CBAM 대응방법에 관한 집합교육 제공(5시간, 4회, 회차별 200~300명 내외)	관계부처 유관기관	3, 6, 9, 12월 (잠정)
CBAM 아카데미	CBAM 대응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이론, 실습 교육 프로그램 제공(4시간, 8회, 회차별 30명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10월
국제탄소규제 대응 전문인력 교육	CBAM 등 국제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기초(14시간, 10회, 총 200명), 심화(28시간, 10회, 총 200명)]	한국환경공단	~4월
배출량 산정 관련 역량 강화 교육	헬프데스크 상담인력을 활용, 배출량 산정 관련 역량 강화 교육 제공(5회, 회차별 20명)	한국환경공단	5월

출처 : 관세무역개발원

## 5 무역위, 태국산 섬유판에 최대 22.44% 덤핑방지관세 부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69차 무역위원회에서 태국산 섬유판,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

태국산 섬유판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었으나, 여전히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판정해 향후 5년 동안 15.29~22.4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경우 2022년부터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수입 감소, 국내 산업의 시장점유율 상승 등의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사우디 생산능력 및 세계 시장동향을 고려할 때 산업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예상해 향후 5년 동안 현재 관세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는 덤핑사실과 국내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사례 중 경우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고자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예비판정했다.

최종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
태국 (최종판정)	피피엠(Panel Plus MDF Co., Ltd.) 및 그 관계사	20.24%
	어드밴스(Advadce Fiber Co., Ltd.) 및 그 관계사	15.29%
	그 밖의 공급자	22.44%
사우디아라비아 (최종판정)	사다라(Sadara Chemical Company) 및 그 관계사	43.58%
	그 밖의 공급자	
중국 (예비판정)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 및 그 관계사	11.88%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eterial Co., Ltd.) 및 그 관계사	9.5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 및 그 관계사	19.17%
	그 밖의 공급자	19.17%

출처 : 산업통상부